

2006년 산업자원부 에너지부문 업무계획

산업자원부는 올해 정책기조를 ▲ 수출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호조를 보인 부문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 국가균형발전·차세대성장동력·해외자원개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업무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에너지 강국 실현기반 확충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소비구조를 선진화하는 한편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를 확충한다.
올해 목표는 에너지 공급능력의 확충, 위기대응역량의 제고로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확충을 기한다.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 에너지기본법을 토대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모색 및 중장기 에너지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투명·공정하게 운영한다.

-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산유국과 소비국간 협력 등을 통해 에너지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석유비축기지 증설과 350만배럴 비축유를 구입하는 한편 발전설비 용량을 6,543만kW로 확충하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차질없는 건설 절차를 수행한다.
-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자동차 연비등급 재조정,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개선 및 통합형 에너지·자원기술 개발 추진을 기한다.

<차세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수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R&D 로드맵 작성, 풍력단지 조성, 태양광주택 3,600호 보급, 바이오디젤 전국보급 및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착공을 시행한다.
- 기후변화협약이 향후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기업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한 민간이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 '환경경제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형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Energy Help Program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요금 할인 및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한 혹서·혹한기의 전기공급중단 유예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LPG 보조금 및 연탄 가격보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시설 무료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부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에너지재단' 설립·운영한다.